

“의사들 집단행동, 책무 저버리는 일... 법 따라 엄중대응”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한시도 더 미룰수 없어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 투입”
“2741개 초교서 늘봄학교 시작
국가돌봄체계 확립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 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

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이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권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 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금, 신고가 행진’서 계속

‘의대증원 취소’ 교수들 소송에 학생도 가세

의대 증원신청 후폭풍
교수협의회
“복지부장관, 권한 없는 무권한자
증원과정도 헌법상 원칙에 반해”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맞서 의대생들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학생들까지 소송전에 합세할 것으로 전해지며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각 대학 의대생들도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국 각 대학별 의대 교수와 의대생도 증원 무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복지부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증원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4월까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가처분 소송 기일이 겹칠 경우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4월까지 증원 배분을 마치면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반면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정부의 증원 추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하며 강경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앞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6일 진행되며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현진 기자 hji@

“스태그플레이션 등 글로벌 불황 발생하면 금값 50% 급등 가능성”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달러(약 4경5424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달러를 넘어 110일 만에 1조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경제 위기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에 대해 수요가 더 몰린 것이라 분석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되면 달러화 가치 ㎜여시 떨어지게 된다.

씨티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금값이 3000달러(약 401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 씨티 북미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현재 2016달러에 거래되는 금은 중앙은행이 구매를 급격히 늘리거나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글로벌 불황이 발생하면 약 50%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사상최고치를 뚫었지만 곧바로 약세로 전환하면서 10% 넘게 하락한 6만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가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지만 가격에 거품 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지나면 4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채굴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해시레이트가 반감기 직후 20% 하락할 것”이라며 “4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산업부,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투입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등 오송·창원 등 산업단지 7곳서 추진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청년 친화형 시설과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펀드사업)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규모는 정부 예산 1868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1조717억원을 유치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펀드사업 우선협상 사업은 오송산단, 창원산단, 울산미포산단, 두서농공·익산제2산단, 천안제3산단·여수산단 등 지역 산단 사업이 6개, 서울디지털산단 1개로 지역 산단 중심이다.

(24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우선협상 7개 사업)

(단위: 억원) /자료=산업부

구분	사업명	정부재원	민간투자	총사업비
오송산단	데이터센터복합시설 개발사업	410	4,486	4,896
창원산단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	400	1,925	2,325
울산미포산단	방류수재이용 개발사업	280	1,390	1,670
서울디지털산단	임대형기숙사 개발사업	303	1,140	1,443
두서농공익산제2산단	지붕형태양광 발전사업	150	850	1,000
천안제3산단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	250	551	801
여수산단	암모니아배관망 구축사업	100	350	450
합계		1,893	10,692	12,585

* 우선협상 과정에서 사업 및 사업별 투자금액·총사업비 규모는 일부 변경 가능

이들 산단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 업무시설, 문화·체육·편

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사업 등이 추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